

혁명에서 사회적 동원으로: 시민사회의 결집과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벨리아 세실리아 보베스*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못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정당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논쟁과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 분석한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 체도를 시민사회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종북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어: 시민사회, 민주화, 국가, 라틴아메리카

이미 몇 십 년부터 시민사회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과 정치권에서 즐겨 다루는 가장 주된 주제가 되었다. 서구 문화와 상상력의 영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논쟁에서는 멀어졌거나 등한시되고 있는 개념에 대해 사회과학과 정치권에서 새삼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은 빈곤, 불평등, 범죄, 허약한 제도 같은 서로 다른 맥락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그런데 어째서 시민사회가 논쟁거리로 등장하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 Velia Cecilia Bobes, 사회학 박사, 멕시코-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대학(FLACSO) 연구교수. 저서로는 *La nación inconclusa. (Re)Constituciones de la ciudadanía y la identidad nacional en Cuba*, FLACSO, México, 2007; *La transición invisible. Sociedad y cambio político en Cuba*(coord. con Rafael Rojas), Océano, México, 2004; *Los laberintos de la imaginación: repertorio simbólico, identidades del cambio social en Cuba*, El Colegio de México, México, 2000가 있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와 시민권에 대한 많은 글들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공고화하는 잠재적 모양이 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먼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열광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특정한 조건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시민사회에 주목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상이한 경로를 통해서였다. 첫째, 최근 라틴아메리카에 비정부기구(NGO)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단체들과 사회운동들은 사회적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 반복되던 군사 독재를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대체하는 민주적이고 메타정치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둘째, 동유럽의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자치가 형성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방해했던 체제 자체가 내파하면서 시민사회가 새롭게 등장했다.

문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주변부’에서 촉발되었으나 중심부에서도 기꺼이 수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근대성의) 거대담론과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역시 위기가 처했기 때문이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법치 국가 복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치가들은 해방과 계급투쟁이 내세우는 유토피아와 혁명적 기획 대신에 시민사회의 제안을 선택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중은 계급중심적 분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수의 행위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출신, 정체성을 대표하며 최우선 순위를 민주주의에 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시민사회가 민주적 담론의 구성 부분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¹⁾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절차의 회복이라는 일차적 목표가 달성되었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증가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포함, 평등,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정치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1)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그 자체로 민주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지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여기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복귀는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있다. 이와 동시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민사회의 개입이 굴곡을 보이는 과정에서 민주 정권의 성립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자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켰으며,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복수적이고 다양하며 힘을 갖는)인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안으로 통합하였다.

1. 몇 가지 개념적 정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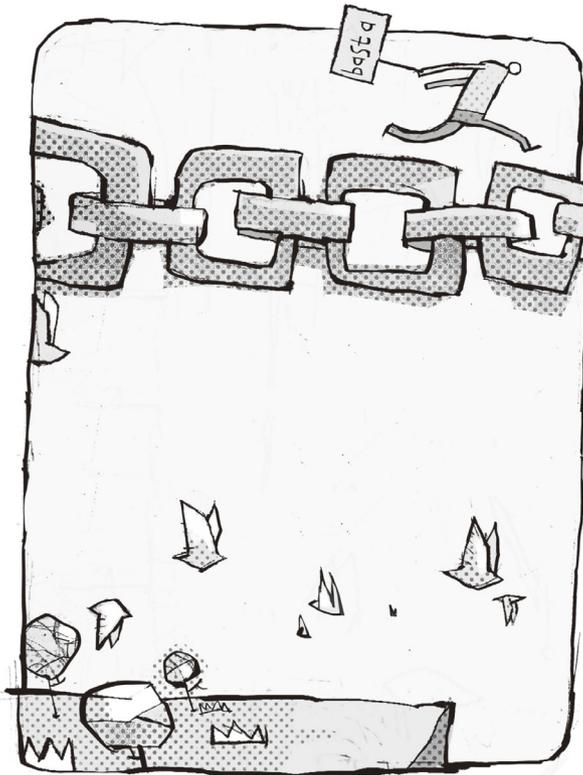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연관된 연구를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토크빌(Tocqueville)처럼 시민사회를 자발적인 연합의 영역으로 이해하든, 코엡(Cohen)과 아라토(Arato)처럼 의사소통의 범주로 이해하든, 혹은 연대의 공간으로 이해하든 간에,²⁾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적어도 두 개의 차원을 가리킨다. 하나는 제도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차원인데, 제도적인 차원은 권리의 범주와 관련되고 상징적인 차원은 정치문화와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에는 조직과 협회뿐만 아니라, 정체성, 사회운동, 공적 공간, 상이한 행위자들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담론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제도뿐만이 아니라 가장 주변부의 비공식적인 사회단체와 그것의 문화적 차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시민사회는 국가에 맞서는 사회의 자율적 입장을 강화하는 연대 관계의 장(場)과 연합의 공간으로 가정된다. 즉 시민사회는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조직을 구성하며, 그 내부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상이한 집단들의 다양한 지식, 경험, 이해관계, 목표, 선호하는 바가 현실화되고 의제로 등장한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가 (경제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순전히 사회적 제도와 조직으로 구성된다면, 시민사회의 문화적 차원이 지향하는 바는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의 토대가 되는 (혹은 될 수 있는) 소속감의 일반적 기준과 덕목을 정의하는

2) Jeffrey Alexander, *Sociología cultural. Formas de clasificación en las sociedades complejas*, Anthropos/Flasco, Barcelona, 2000.

사회적 가치와 상징적이고 서사적인 규범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분석적인 차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적이지 않은 사회 영역과의 복잡한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상호작용의 공간인) 시장과 (정치적 규제의 영역인) 국가 사이의 (고전적인) 차별을 받아들일 때조차도 시장과 국가가 시민사회와 맺는 관계는, 우호적 관계이건 파괴적 간섭이건 간에, 경계(frontera)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³⁾



© Nueva Sociedad / Patricio Betteo 2010

3) Jeffrey Alexander, ob. cit.

시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조건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간섭하는 데, 그 결과는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드러난다. 국가는 사회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간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경향성들 역시 존재한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과 국가가 관계를 맺는 원리인 시민권인데, 시민권은 시민사회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연대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민권은 시민의 권리를 통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정치적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화한다. 기본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행위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공간과 채널을 결정함으로써 참여의 방식이 정해지는 것처럼 시민사회의 권리도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제도화된다.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도 포함하는) 시민의 권리는 국가 권력의 주변부에서 시민들의 이익과 관점을 연합하고 결집시키는 최소한의 토대이며, 당국에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시민들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대표에게 주어진 권력의 지분을 넘어서서 권력의 또 다른 지분을 요구하는 방식이 시민의 참여이며, 이러한 경험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집단적 행동과 사회운동을 통해 얻어진다. 국가 권력에 가려져 있던 시민사회를 드러내주는 공적인 토론도 그러한 공간을 통해 표출된다.

시민권과 시민사회의 덕성은 사회적 포함(*inclusión*)이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도 배제(*exclusión*)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을 예로 들자면, 권리와 의무를 통해 정치적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갖는다. 어떤 집단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⁴⁾ 배제가 합법화되는 방식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예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란 본래 사회적 행위자와 공적인 담론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영역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배제도 만들어낸다. 시민사회의 핵심을 규정하는 담론이 시민사회에 소속될 수 있는 긍정적 자질과 부정적 자질을 분류하고 정당화하는 이율배반을 드러내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용

4) 상이한 국가적 맥락과 역사적 시기에 이러한 배제는 가난한 자들, 문맹자들, 여성들 혹은 소수 인종들을 포함했다.

하는 메타언어가 (동지/적, 순결한/불결한, 종교적인/세속적인 것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을 통해 누가 배제되고 억압되어야 하며, 누가 배제하고 억압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의 개입에 의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민권과 시민사회는 정태적 실재가 아니라 투쟁과 논쟁이 펼쳐지는 역동적 무대이다. 이 때문에 포함/배제의 기준들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되거나/혹은 축소되어왔다. 공적 공간에 참여하는 많은 사회운동과 집단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대항담론들이 순환하면서 소속감을 규정하는 긍정적 자질과 연관된 경험적 내용들이 변화된다. 시민의 권리는 양적으로도 증가했고-시민권에는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적 권리도 첨가되었다-,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도 확장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유통되면서 시민사회에 소속될 수 있는 기준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그 전까지 배제되었던 사회적 주체들이 합류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운동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성참정권으로 시작된)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성 평등의 가치를 높이 내걸었다. 최근에는 남성중심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개인과 시민의 자격의 토대가 된 근대 자유주의 정치적 전통을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과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켰다.

여성운동의 경우처럼 널리 인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주민, 인종적·종교적 소수자, 이성에자와 다른 성 정체성 집단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2의 개인이나 시민으로 취급되는 사회적 집단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배제됨으로써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도 못했고, 오랫동안 담론의 공간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공격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민주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합법적으로 시민사회에 소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공간이다. 이러한 정치적 공간은 국가/시장/사회의 절속이 만드는 여러 가지 불공정에

5) Jeffrey Alexander, ob. cit.

대한 공적인 토론을 빈번하게 무시했던 의사소통의 공간이 된다. 사회운동들과 사회적 기구들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에 소속됨을 표시하는 공적 공간에서 유통되는 담론들을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들의 결정에도 참여한다. 다양한 국가적 사안에 참여하는 활동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의제들은 핵심적인 문화적 개념들과 사회와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규정들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화 과정에 개입하면서 정점에 도달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과 단체들의 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 첫째, 정치의 상징적 지평을 확장했다. 둘째,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셋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상징적 기준과 시민사회의 가치를 재설정했다. 넷째, 공적 공간을 확장하고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시민권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기여한 바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틀에서 민주주의, 시민권, 시민사회가 어떻게 겹쳐져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II. 엄청난 구설수와 만족스러운 결실: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이 글의 출발점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대륙 전체로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권위주의적 정권들은 시민권의 보장을 유예하거나 짓밟았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들을 유린했다. 이 때문에 인권, 시민권, 민주주의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논쟁의 중심을 차지했다. 인권단체들과 연합한 ‘5월 광장의 어머니회’와 ‘고문 반대 실종자 가족 모임,’ 그리고 가톨릭 사제단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폭압을 고발하고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정치적 행동 방식을 재설정하고 시민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사회적 혁명’이라는 거대 주제가 민주적 이행이라는 주제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중요한 변화였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미 남부 지역의 민주적 이행의 주인공이자 중미 지역의 평화

정착의 주인공인 시민사회가 정권 교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개방성과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처음에 사회운동을 자극한 것은 인권 담론이었다. 인권 담론은 사회적 집단 간의 차이에 바탕을 둔 공정성을 성문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단적 행동 강령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시민사회의 각성은 공적 공간을 민주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제도의 회복, 생명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다른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는데, 여기에는 과거의 정치적 담론이 무시하고 묵살했던 성적 권리, 가정 폭력,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 환경 보존의 의무, 문화적 관습에 뿌리를 둔 집단적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젠더, 종족,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정치화함으로써 더 많은 주제들이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이러한 대항 담론들은 공적인 것(lo público)의 규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한 주제가 일반적 관심사로 변하면서 그 전에는 주변에 머물러 있거나 종속적 위치에 있던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렸고 정치적 아젠다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공적 공간이 등장하고 이러한 공적 공간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많아짐으로써 사회적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안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원주민운동 같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과 NGO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관심사를 공적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로 바꾸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옴부즈맨(defensoría del pueblo), 여성부, 원주민 연구소, 이주민 보호기관, (미성년, 장애인 등) 취약 그룹 보호기구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도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 바뀌고 정치문화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활동의 핵심인 인권 담론은 시민권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변화시켰다. 평등과 자유의 원리를 (국가에 속한 시민의 권리를 토대로 하지 않고) 인격체의 추상적 권리를 토대로 성문화함으로써 문화적 권리와 자주적 결정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시민권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정체성과 특이한 집단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단체 행동과 사회적 동원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다원론적 담론들은 집단적 권리의 등장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를 자극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의 지평을 넓혔다. 헌법 개정에 ‘제4세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러한 압력의 결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종족적 권리,⁶⁾ 환경(보존의) 권리,⁷⁾ 성차의 권리⁸⁾를 인정한다.

차이를 긍정하는 사회운동이 시민권/보편주의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치 영역의 이러한 변화가 평등의 기준과 보편적 권리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정치제도에서 비례대표제는 남성-백인-이성애자를 우선시하는 시민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민중 주권에 바탕을 둔 이상적 민주주의에 근접한 참여의 방식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운동이 제안하는 시민권의 개념은 정치 체제 내부의 권력의 재편을 내포하는 것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의) 새로운 실천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자율적인 집단행동의 중요성, 사회적 협력을 위한 자치조직, 그리고 시민의 참여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사회적 권력의 재편에서 새로운 실천이 지향하는 바는 (관용[*tolerancia*], 다원주의, 차이에 대한 존중, 연대 같은) 민주적 공존의 원리이지만, 또한 사회적 분노의 표출을 통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투쟁의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양상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축제 행렬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와 불처벌(*impunidad*)에 항의하는 침묵시위에서부터 격렬한 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은 이 때문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냄비 두드리기 시위’(el *cacerolazo*)와 피켓시위자운동(*los piqueteros*), 혹은 멕시코의 오아하카민중의회(*la Asamblea Popular de los Pueblos de Oaxaca*)인데, 이러한 시위들은 (정당과 일정한 선을 긋고 대의체제 외부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 의제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기 위한 사회적 결의이다.

6)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7) 아이티, 쿠바, 과테말라,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페루.

8)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사회-시장의 관계에서도 시민적 대안이 창출된다. 멕시코의 소비자와 채무자 조직인 ‘바르손’(Barzón)은 집단행동을 통한 시장논리에 대한 저항이자 사회적 방어기제이다. 바르손의 혁신적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공정무역운동’(el Movimiento de Comercio Justo)이다. 공정무역운동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라틴아메리카 농업생산자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 간 무역을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협조와 연대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켰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이행을 통해 제도가 변화되기는 했지만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지도 못했고 (특히 가장 배제된 집단을 포함한) 시민의 권리는 여전히 존중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논쟁들은 새로운 사회적 담론에 자극받아 국가권력의 통제와 정치적 과정에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회계 강화의 필요성과 협치(gobernanza)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제일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에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주적 통치를 특징짓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방식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은 권력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의 기능을 감시하는 것이다.⁹⁾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는 국가에게 정치적 관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정치의 위치(locus)를 이동시킨 것이다. 첫 번째가 정치적 투쟁이 시민사회와 시민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세계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력 아래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초국가적 영역이 등장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관계가 달라졌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방식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직면한 것은 국가중심주의에

9) 시민사회가 정치를 감찰하는 좋은 예는 멕시코의 ‘시민동맹’(la Alianza Cívica)이나 페루의 ‘시민권력’(Poder Ciudadano)이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정보이용 연방제도’(el Instituto Federal de Acceso a la Información)나 콜롬비아의 ‘시민감시단’(la Veeduría Ciudadana)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글이나 사회단체의 기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사탄으로 변화하는 현실이다.

시민사회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가의 전통적 역할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약화되면서 국가 기능의 많은 부분이 시민사회로 넘어갔다. 최근 몇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비정부 기구들은 사회복지, 농촌 발전, 의료, 교육의 영역에서 국가가 방치한 공백을 국가를 대신해 메우고 있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잠정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새로운 비정부 기구들은 경제위기 당시에 정규직이나 공무원에서 쫓겨난 전문가 집단과 과거의 활동가들을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했고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하고 이질적이고 복합적이 되었고, 사회적 기구들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사회적 안전망, 소비자의 권리, 출산의료 같은 문제에 참여했다. 또한 시민교육, 리더십 함양, 취약집단의 노동 분야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국가의 몇몇 기능이 시민사회로 이전되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시민단체가 주관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대의제적 정당정치에 대해 함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국가는 권력 기구의 최상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권력을 가지며 사회적 변동에 좌우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치 무대가 확장되면서 사회와 시민의 참여가 더 쉬워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정치인들의 행태에서부터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쟁을 담당하게 되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가는 특권적 위치를 상실하고 평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율성과 자주경영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적 요구와 시민권이 행사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교회, 학계, 언론매체 그리고 정치적 정당과 같은 사회적 집단들과 수평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국가·사회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도전이며 저항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를 확장한다. 또한 사회적

동원과 주도권의 증가는 시민사회 자체를 정치화하는 것이며 그 전까지 차별적으로 규정되었던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구역의 회’(la asamblea barrial)와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베스 오브라도르를 지지하는 시민운동’(el Movimiento Ciudadano de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은 정당을 무시하고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공간이 되었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확장이 민주주의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국가 역할의 축소와 반비례하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과도한 개입’(superactivismo)이 민주적 제도를 허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서 수없이 보았던 것처럼 국가를 대단히 허약하게 만들었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문화를 염두에 둔다면 시민사회의 ‘과도한 성장’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의 경우처럼 시민사회와 대립한 여러 명의 대통령이 쫓겨났던 경험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시민사회가 강화되고 정치화되며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현실 이면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시민권력이 탈정치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주체들이 정치적 시민의 자격이 아니라 여성, 원주민, 동성애자 등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정치화 현상은 때로는 포퓰리스트적 리더십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거나 반민주적인 정책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시민이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특별한 집단적 정체성이 합쳐진 사회적 부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사회운동은 차별적 특질을 갖는 지방적 관점에서 집단성을 재규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집단성을 국민성으로 규정하는 근대적 관점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지역운동은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민주적 정치에 중대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가 사회적 공간을 개방시킴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자체는 민주적 이상에 걸맞은 완벽한 조화와 합의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행위자들 역시 반민주적 힘과 전형적 가치를 버리지 못한다. 결국, 시민사회는 인권과 하위주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집단들 뿐만 아니라 원리주의자들, 신나치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마피아들, 조직범죄자들로도 구성되는 모자이크이다.

III. 세계화 시대의 시민사회

앞에서 언급한 것을 보충완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초국가적 영역의 출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경제 세계화가 문화적인 측면에 충격을 주었고 이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시민사회를 사유할 필요가 생겼다. 국가와 대의적 정당 제도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와 이주의 증가 때문이다. 국내적 논의와 결정을 초국가적인 상황으로 이전시키는 국제화로 인해 담론이 초국가화되고 ‘전지구적 시민사회’가 등장해 국가에 로비하고 압력을 작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생태환경의 보호, 대량살상무기의 금지, 빈곤과 기아, 혹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 등 인류에게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특정한 국가의 지원에 받지 않는) 국제적 성격의 비정부 기구가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기본적 개념이다.¹⁰⁾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비정부 기구가 국제엠네스티, 옥스팜(Oxfam), 그린피스(Greenpeace)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비정부 기구들이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며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기구의 목적과 목표도 반드시 국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비정부 기구들은 지역적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중미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상황은 이중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후원, 연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젠다가 종속되고 참여자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 사파티스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지구적 시민사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파티스타운동을 진압하려는 멕시코 정부에 제동을 걸었고

10)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hn Keane, *Global Civil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3.

대응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전통 매체와 새로운 통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파티스타들은 세계 도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적 여론과 국내·국제 사회를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정부가 그들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이 경우에 ‘전지구적 시민사회’는 국내 문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전지구적 시민사회는 문제가 되는 선거 과정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두라스 쿠데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 비정부 기구들과 국제적인 금융 기구들 사이에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성, 아동, 소수 인종 문제 같은) 수많은 국제적 논쟁과 토론과 참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운동들의 아젠다가 국제화되었고, 이 때문에 같은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공적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제외되었다. 즉 초국가적 아젠다 때문에 국내의 정치적 이슈들이 희일화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과 시민협력단체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국내 문제를 폐기시키는 ‘식민화’ 현상이다.

시민사회의 세계화는 법과 시민권의 맥락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 이주의 흐름이 증가하고 (변화되면서) ‘이중 국적자’¹¹⁾와 ‘초국가적 시민권’¹²⁾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국민국가 모델의 귀속 원리로부터 벗어나 세계화로 이동함으로써 시민권의 탈영토화 개념에 해당된다. 세계화로부터 파생된 초국가적 담론은 이민 송출국과 이민 수입국의 이민법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느슨해지고 이민 문제는 국내 문제에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이 급증하고 그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사회가 초국가적 공동체로 확장되면서(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사람들, 뉴욕의 도미니카 사람들, 유럽의 오틀발로 사람들, 아르헨티나의 볼리비아 사람들, 마이애미의 쿠바 사람들, 칠레의 페루 사람들 등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기에 여러 집단들이 합쳐지면서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납치에 항의하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경우처럼) 국내 문제에도 영향을

11) William R. Brubaker,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ondon-New York, 1989.

12) Yasemin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4.

미친다.

최근에 새로운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시민사회의 가장 조직화되지 않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시민사회가 초국가화되는 현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광범위하고 탈영토화된 가상의 공동체를 만든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소위 ‘블로그공간’(blogosfera)이라고 부르는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대화 공간이 열렸고, 이를 통해 부가적인 관련 사항들을 대변하고 신속하게 대중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매체들은 신속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간 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으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는 거대 매체의 외곽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연대하며, 독립단체의 계획과 주도권을 전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 번 멕시코 대선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시민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고, 비공식적이고 주변부에 위치한 단체와 활동가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며, 시민사회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되고 있다.¹³⁾ 이와 동시에 새로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해지며, 공적 공간을 위한 ‘대안적 위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즉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가상공간으로 이동시켜 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신기술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반향, 영향력이 아직도 제한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의 가상공간으로의 이동이 말 그대로 민주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13) 인터넷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Peter Levine, “Civil Renewal and the Commons of Cyberspace,” en *National Civil Review*, vol. 90 No 3, otoño de 2001, pp. 205-212; Peter Levine, “The Internet and Civil Society,” en *Philosophy & Public Policy*, vol. 20, No 4, otoño de 2000, pp. 1-17; Peter Ester y Hek Vinken, “Debating Civil Society. On the Fear for Civil Decline and Hope for the Internet Alternative,” en *International Sociology*, vol. 18, No. 14, 12/2003, pp. 659-680.

있다. 한편으로는,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인터넷을 통한 관계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운동단체들의 안정적이고 뿌리 깊은 유대가 깨질 위험이 있다.¹⁴⁾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민중이 끊임없이 불평등하고 주변화된 현실에 처해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의 이용이 이용자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또 다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사회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공식적 집단이 사회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할 수도 있고 수많은 주변화된 단체의 행동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쿠바에서 일어난 상황에서 보았듯이 블로그, 전자메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적 매체가 무시했던 독립적인 문화 집단과 반체제 단체의 행위가 알려졌다. 엄연히 한계는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판적 토론은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 때문에 가능하며, 집단적 행동에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사회 공간을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역동적 대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IV. 한 걸음 뒤로: 잠정적 결론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옹호하지만 시민사회가 신비화되고 이상화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이 글에서 부각시키려고 의도한 것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연관관계이며,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강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공고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이 국가의 중복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국가나 국가 기관의 대체물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며, 또한 비정부 기구가 국가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고 정치가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간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위에 세워지고 (강화되며),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당을

14) P. Levine, "The Internet and Civil Society," cit.

후원하고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가 권력에 대한 균형추이자 감시자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치국가도 요구되고 시민사회가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김은중 번역)

참고문헌

- Arditi, Benjamín, “Soberanía light y ámbitos políticos supranacionales”, en *Perfiles Latinoamericanos*, N°17, 12, 2000.
- Castells, Carme(comp.), *Perspectivas feministas en teoría política*, Paidós, Barcelona, 1996.
- Castellos, Manuel, “The New Public Sphere: Global Civil Society, Communication Network, and Global Governance”, e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 N°1, 2008, disponible en <<http://ann.sagepub.com/>>
- Dagnino, Evelina, Alberto J. Olvera y Aldo Panfichi(coords.), *La disputa por la construcción democrática en América Latin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Universidad Veracruzana, México, 2006.
- Olvera, Alberto(coord.), *La sociedad civil: de la teoría a la realidad*, El Colegio de México, México, 1999.